

여야, 국감 첫날 격돌… ‘김건희·이재명 의혹’ 충돌

행안위·국토위·법사위 등서 공방
시작부터 상임위 곳곳 고성 얼룩
야, ‘관저 공사’ 등 김 여사 정조준
여 “李, 재판지연 심각” 형사 고발

여야는 22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특혜 의혹 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부, 과학기술 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국감을 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 시기회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된 회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성수동 21그램 사옥을 직접 찾기도 했다. 위성근 민주당 의원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오랜 관계가 드러났고,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스

충격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도 질의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

로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 ‘자료 요구하는데 프레젠테이션(PPT)를 왜 띄우는가’ 등 거센 신경전이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

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법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 재판이 과도하

게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구형이 합당하지 않라며 맞불을 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따졌다.

김 여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소환됐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황제 관람’ 의혹에 대해 “(문체부와 KTV는) 영부인이 갑자기 방문했다고 주장하는데 작은 기관에서 하는 문화 행사에 전직,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이 다 참석한 게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냐”며 “KTV의 방송 기획관과 PD 등을 15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영부인께서 오신다고 하면 저에게도 연락이 왔을텐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뒤늦게 오셨다는 보고는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정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만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진욱 “대기업 갑질 소송 중재… 광주 청년기업 도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이 7년여를 끈 ‘대기업의 갑질성 상표 침해 소송’을 중재해 폐업 위기에 몰렸던 광주지역 청년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왔다.

7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준수 일동후디스(주)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주)아이밀 대표 측은 이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7개월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간의 소송 분쟁을 끝냈다. 일동후디스는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주)아이밀이 이미 2012년 상표 출원을 마친 브랜드인 아이밀을 2018년 1월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다. 지난 2023년 11월까지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다,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 갑질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경우다.

정 의원은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손해배상금(7억 9600만원)·위로금(2억원)을 즉시 지급 및 상고 포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휴게소 음식, 우리 농수산물 비율 확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7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판매 음식의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마트 활성화 △국내산 농산물 사용 휴게소에서 서비스 평가 가산점 부여 △용역 통한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다.

이는 서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식자재 음식 실태를 줄기차게 비판하며 국내산 식재료 활용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많이 팔리는 호두과자와 우동에 사용되는 호두와 면은 100% 수입산이다. 서 의원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확대는 농어가 소득향상을 비롯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농어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野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세일하냐”

조규홍 “의료공백 최소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교육 대상 정원을 잔뜩 늘려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데 이어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 수업을 말한 다”고 질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무슨 덩핑 물건이나? 세일하냐”면서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의대생이 불출석으로 수업 일수가 뒤로 밀리니까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이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의대 학사 개편을 통해 (수업을) 마음대로 줄인다. 옛장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교육부라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마치 한두 사람을 위한 정부 부처가 돼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된다”며 “이런 학사 교육 일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 정상화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소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전공의 복귀를 내년 3월로 확인하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B’에 대해선 “지금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해서 중증 진료가 공백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새 장 열어”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말라카냥 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뜻을 모았다.

지난 1949년 수교 후 정상 차원에서 양

국 관계를 설정하고 공동 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관계는 1950년 한국전에 외국군 최초로 필리핀 병사들의 파병으로 시작된 연대에 기반하여 강화돼왔다”며 “오늘 필리핀과 대한민

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계속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